

내년 국가채무비율 47.8% '굉충'...재정준칙 기준도 '턱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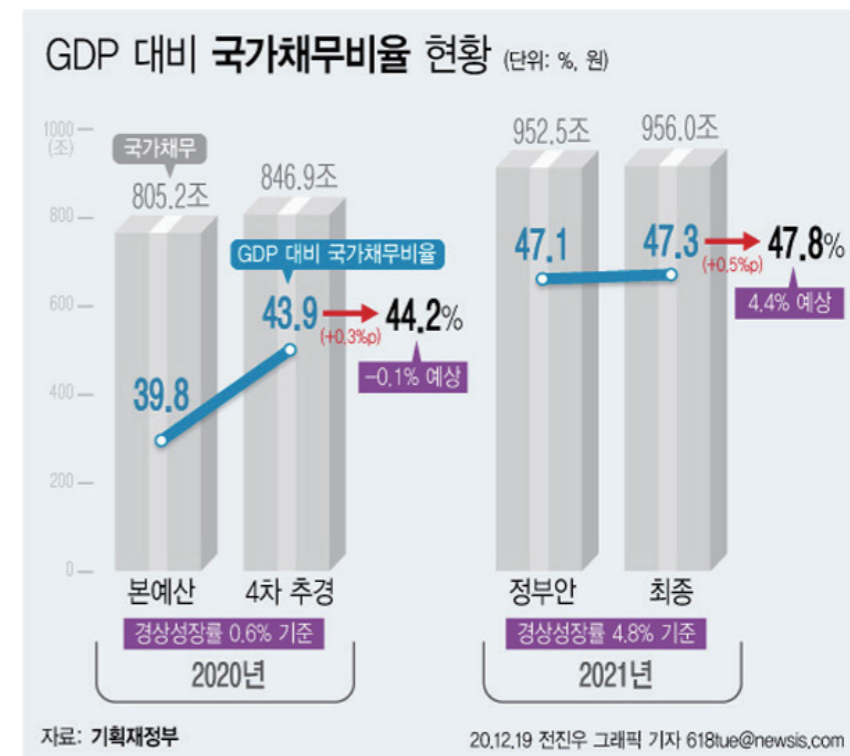
정부, 올해 -1.1% 성장률 제시...내년 3.2% 전망
 성장률 하향 조정으로 경상성장률도 대폭 낮춰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4.2% 상승 예상
 내년 추경도 변수...재정건전성 더 악화 우려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 충격으로 올해 22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올해와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예상보다 상승할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제시하면서 올해 성장률이 -1.1%를 기록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시절인 1998년(-5.1%) 이후 22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이다. 지난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정부가 제시한 성장률(0.1%)보다는 1.2%포인트(p) 낮았다. 경상성장률(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성장률) 또한 0.6%에서 -0.1%로 대폭 낮았다. 경상성장률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과도 연동된다. 경상성장률이 낮아지면 분모가 되는 GDP가 쪼그라들면서 국가채무비율이 상승하는 구조

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올해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846조 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국가채무인 805조 2000억원보다 41조 7000억원 증가하는 규모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9.8%에서 43.9%로 올라간다고 예측했다. 이는 경상성장률 0.6%를 토대로 한 수치다. 이번 발표에서 정부가 예상한 올해 경상성장률 -0.1%를 달성하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4.2%까지 올라간다. 애초 정부 전망치보다 0.3%p 상승하는 셈이다. 내년 상황도 녹록치 않다. 정부는 애초 올해 558조원의 슈퍼예산 편성으로 나랏빚이 956조원으로 불어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47.3%로 오를 것으로 봤다. 올해 본예산과 비교하면 국가채무는 150조원 8000억원

쌓이고 국가채무비율은 7.5%p 늘어난다고 예측했다. 하지만 새롭게 제시한 경상성장률 4.4%를 대입하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8%로 더 높아진다. 정부는 이번 전망에서 2021년 경제성장률이 3.2%, 경상성장률이 4.4%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만약 내년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아 성장률이 정부 예상보다 낮아지게 되면 나랏빚이 쌓이는 속도는 더욱더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 내년 예산이 풀리기도 전부터 정치권을 중심으로 흘러나오는 추경 편성도 변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내년 예산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경기 반등을 이루기에는 부족하다고 보고 연초부터 추경 편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하고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 상당한 자금이 필요해 추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금액은 3차 재난지원금 규모(3억원)보다 커지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내년 상반기에만 역대 최고 수준인 63.0%를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상대적으로 하반기에 대응할 예산이 부족해질 경우 추경 가능성도 점쳐진다.

문제는 재원이다. 올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4차례 추경 편성 과정에서 재정 여력이 이미 바닥났기 때문이다. 여기에 코로나 팬데믹(글로벌 대유행·pandemic)으로 세수가 쪼그라들면서 여윌돈마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상황만 두고 추경을 고려한다면 국제 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국가채무는 더욱 급증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또한 상승이 불가피하다. 국가채무가 더 늘어나면 정부가 제시한 재정준칙 기준도 무너질 우려도 있다. 정부는 지난 10월 ▲국가채무비율 60%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 비율 3% 등 두 가지 조건을 조합한 재정준칙을 내놓았다. 국가채무비율을 60%로 넘는 값과 통합재정수지 비율을 -3%로 넘는 값을 골라 1.0을 넘지 않는 게 핵심이다. 내년 국가채무비율(47.8%)과 통합재정수지(-3.7%)를 대입해 계산할 경우 0.97까지 오른다. 정부의 기준치인 1.0에 육박한 수치다. 앞서 정부는 재정준칙을 2025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방침이지만, 도입 전에도 재정준칙 준수를 위한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확장적 재정이 불가피하다고 보면서도



재정 건전성 악화 속도에 우려를 드러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내년 상반기에 재정을 63% 집행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는 37%밖에 남지 않는다"며 "코로나19 불확실성이 이렇게 큰데 상반기에 큰 금액을 집행할 경우 대대적 추경을 또 할 가능성이 크다. 대대적인 추경은 재정 건전성을 크게 악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미희기자



LG 클로이 바리스타봇, 바리스타 자격증 땀
 LG전자 'LG 클로이 바리스타봇(LG CLOi BaristaBot)'이 (사)한국커피협회로부터 국내 최초로 '로봇 브루잉 마스터' 자격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매출 0원, 죽기 직전까지 왔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절규

소상공인들 빚에 빚을 쌓는 생활 지속
 고정 지출 큰 비중 월세 감당 어려워



19일 경기북부지역 식당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점심과 저녁시간 대 손님들이 줄어들어 빈 테이블들이 남아있다.

"정부가 강제로 가게 문 닫게 해서 대리기사 일을 시작했지만 하루 수입은 고작 3만 원, 쌓여가는 밀린 월세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들 보며 어떻게든 버텨야 하는데 이달을 넘길 수 있을지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힘든 정도를 넘어 죽기 직전까지 와 있는 것 같아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질망하고 있는 경기북부지역을 비롯한 전국 소상공인들의 눈물 섞인 절규다. 이들은 급격한 매출 하락과 일부 업종에 대한 영업제한으로 은행 대출을 받아 월세와 관리비 등을 메꾸며 하루하루를 간신히 버티고 있

11월 항만 수출입 물동량 3.6% ↓ ...컨테이너는 5.4% 증가

미주·구주·동남아 수출물량 증가
 지난달 전국 무역항에서 처리한 물동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6% 감소했다. 다만, 미주·구주·동남아 수출물량을 중심으로 컨테이너 물동량이 3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1월 전국 무역항에서 처리한 항만 물동량이 총 1억2977만톤으로, 전년 동월(1억3456만) 대비 3.6% 감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수출입 물동량은 광석제품의 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유류(원유·석유정제품 등) 물동량 감소와 발전용 연료(유연탄 등)의 수입 감소 등으로 전년 동월(1억1435만) 대비 3.3% 감소한 총 1억1054만톤으로 집계됐다. 반면, 컨테이너 물동량(TEU 기준)은 지난 9월부터 이어진 증가세가 지속돼 지난달에는 전년 동월 대비 5.4% 증가한 257만TEU를 기록하며 20개월만에 최대 증가율을 보였다. 수출입은 전년 동월(140만TEU) 대비 1.4% 증가한 142만

"우리 기업 절반, 내년 투자·채용 축소 전망"

높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으로 '경영 계획 초안도 수립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특히 300인 미만 기업에서 이같은 답변 비율이 57%로 높게 나타났다. 경영계획을 수립한 기업에 대상으로 올해 대비 내년 투자계획을 조사한 결과 60% 이상이 '축소'라고 응답했다. 올해 수준은 30%, 확대는 10%에 그쳤다. 채용계획은 축소하겠다고 한 기업이 65.4%로 더 높게 나타났다. 올해 수준은 28.5%, 확대는 6.2%로 집계됐다. 내년 경제성장률은 44.8%가 2.5%~3.0%로 전망됐다. 응답 기업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2.8%로 집계됐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이전으로 회복되는 시점은 2023년 이후라는 응답이 가장 높